

# “보훈,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기본... 모든애국 공경”

## 文 대통령, 현충일 추념사

순직소방공무원 묘역 등 참배

“보훈 예산 사상 첫 5조 돌파  
생존 애국지사 예우금 50% ↑”

문재인 대통령은 6일 대전현충원에서 열린 현충일 추념식과 별도로 순직소방공무원 묘역과 무연고 묘지 등을 찾아 참배했다. ‘보훈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다.

문 대통령은 “보훈은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한 존경이고 이웃을 위한 희생이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의 가슴에 깊이 새기는 일”이라면서 “그래서 보훈은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기본으로 정부는 모든 애국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보훈을 더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족, 동료 소방관들과 함께 찾은 순직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6일 오전 대전 현충원에서 열린 순직 소방관 3인의 추모식에서 현화하고 있다. 순직 소방관 3인은 올 3월 충남 아산에서 출동 임무 중 사고로 순직했다. /연합뉴스

소방공무원 묘역에선 최근 순직한 고 김신형 소방장, 고 김은영 소방사, 고 문새미 소방사를 위해 추모했다.

이들 소방관 유족은 전날 문 대통령이 국가유공자·보훈 가족을 청와대로 초청해 마련한 오찬 자리에도 함께 했다.

문 대통령은 추념사를 통해 “교육생이었던 김은영, 문새미 소방관은 정식 임용 전이라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없었다”면서 “똑같이 국민과 국가를 위해 희생했는데도 신분 때문에 차별받고 억울함이 있어선 안 된다. 정부는 두 분을

포함해 실무수습 중 돌아가신 분들도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소방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했다”고 말했다.

무연고 묘지에선 고 김기억 중사 묘지에 참배했다. 충남 공주 출신인 고 김중사는 6·25 전쟁이 난 후 다수의 전투에 참전하다 53년 5월3일 양구전투에서 전사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김중사의 묘소를 참배하며 국가가 국민에게 드릴 수 있는 믿음에 대해 생각했다”면서 “그는 스물 둘의 청춘을 나라에 바쳤지만 세월이 흐르는 동안 연고 없는 무덤이 되고 말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결코 그 분들을 외롭게 두지 않고 끝까지 기억하고 끝까지 돌볼 것”이라면서 “모든 무연고 묘소를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기억해야 한다. 그것이 국가에 헌신했던 믿음에 답하고, 국민이 국가에 믿음을 갖게하는 국가의 역할과 책무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집권하면서 국가보훈처를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등 국가유공자에 대한 처우 개선에 본격 나서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보훈 예산 규모가 사상 최초로 5조원을 넘었고, 생존해 계신 애국지사의 특별예우금도 50% 올려드리게 됐다”면서 “참전용사들의 무공수당과 참전수당도 월 8만원씩 더 지급해 드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8월에는 인천보훈병원이 문을 열고, 강원권과 전북권에도 보훈요양병원을 신설할 계획이다. 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는 전문재활센터가 생긴다.

한편 정부는 올해 현충일 추념식 표어를 ‘428030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당신을 기억합니다’로 정했다. ‘428030’은 현충원, 호국원, 민주묘지 등 전국에 있는 10개 국립묘지에 안치된 안장자 숫자를 의미한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 박원순 보훈수당 인상 검토 야당 단일화 신경전

### 더불어민주 박원순

“보훈병원 이용 어르신 숙소 만들어”

### 바른미래 안철수

“박원순 이길수 있나” 김문수 압박

### 자유한국 김문수

“박 후보 7년 시정 심판 힘 합쳐야”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가 6일 오후 6.25참전유공자회를 방문해 경례 자세를 하고 있다. /박원순 캠프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가 현충일 기념 행사에서 보훈수당 인상 검토를 약속했다. 야당 후보들도 안보 행보에 나서는 한편, 단일화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박 후보는 6일 오후 서울복지타운에서 6·25참전유공자회를 방문해 “취임 후 복지본부장에게 보훈단체를 전부 방문시켜 250여권짜리 보훈종합계획을 발표·시행했다”며 “당시 예산 사정상 못했지만, (보훈수당 인상을) 충분히 검토해보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보훈병원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인근 집을 몇 채 구입해 게스트하우스로 만들었다며 시정을 홍보하기도 했다. 앞서 같은날 삼청동에서 열린 “나라를 지킨 여성영웅들을 만나다” 행사에서는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삶을 발굴하는 일을 지방정부도 나서야겠다고 결심했다고 말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50% 안팎의 지지율로 여유를 보이는 박 후보와 달리, 야권 후보들은 지방선거를 일주일 앞둔 이날도 단일화에 대한 접점을 보이지 않았다.

바른미래당 안철수 후보는 이날 강동구 중앙보훈병원을 방문한 뒤 기자들에게 “누가 1대1로 경쟁할 때 박 후보를 이길 수 있느냐”며 자유한국당 김문수 후보를 압박했다.

이어 “누가 2등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다자구도에서 몇 퍼센트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박 후보를 이길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안 후보는 박 시장과 맞붙어 이길 수 있는 후보는 자신이기 때문에, 김 후보가 대승적 양보를 해야 서울 시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문수 후보도 물러서지 않았다. 김 후보는 같은 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대통령의 독주 저지와 박 후보의 7년 시정을 심판하기 위해 힘을 합쳐야 하는 선의를 이해한다고 밝혔다.

다만 두 후보 간 단일화의 구체적 조건에 이견이 있고, 김 후보의 사퇴를 종용하는 태도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냈다.

선거를 일주일 앞둔 이날 막판 단일화 협상 회동 가능성도 일축했다.

현재 박원순 후보의 지지율은 야권 후보들에 훨씬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요신문이 조원씨아이에 의뢰해 지난 2~4일 서울 거주 성인 928명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박원순 후보는 44.7% 지지율을 보였다.

박 후보에 이어 안철수 후보가 20.4%, 김문수 후보는 12.3% 지지율을 보였다.

MBN이 (주) 메트릭스코퍼레이션을 통해 지난 2~3일 서울시 거주 성인 800명에게 설문한 결과, 박원순 후보 지지도는 52.3%였다.

김문수 후보는 13.8%, 안철수 후보는 13.7%로 비슷했다. /이범중 기자 jaker@

## “8~9일 지방선거 사전투표 하세요”

선관위, 신분증 지참때 전국서 가능

까지 보관된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사전투표가 8~9일 전국 3512개 사전투표소에서 진행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별도의 신고는 필요 없으며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의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www.nec.go.kr)이나 ‘선거정보’ 앱에 나와 있다. 투표 시간은 오전 6시~오후 6시다.

투표장에는 본인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되어 있는 신분증 중 하나를 반드시 가져가야 한다.

자신의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구 밖에서 사전투표할 때는 기표용 투표용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본인의 선거구 안에서 투표할 경우, 투표용지만 받아 기표한 뒤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해당 사전투표소가 선거구 안이나 밖에 있는지는 투표소 입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

투표지가 들어있는 회송용 봉투는 매일 투표가 마감된 후 참관인이 보는 가운데 관할 우체국에서 인계한다. 봉투는 해당 지역구 선관위에 우편으로 보내진다.

회송용 봉투 없이 투표지만 들어있는 투표함은 관할 선관위 청사 내 CCTV가 설치된 별도의 장소에서 선거일 오후 6시

중앙선관위는 선거종합상황실 내에 설치된 통합관제센터에서 투표함 보관 상황을 24시간 살펴본다.

사전투표는 전국 단위 선거로는 4년 전 제6회 지방선거 때 처음 도입됐다. 당시 투표율은 11.5%였다. 2016년 20대 총선 12.2%, 작년 19대 대선 26.1%로 점차 높아지는 추세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거인이 7장의 투표용지를 받는 만큼 투표 시간이 늘어날 것으로 본다. 이 때문에 지난해 대선보다 투표용지 발급기는 1000여대, 기표대는 1만4000여대를 추가로 준비했다.

중앙선관위는 투표용지 발급소시간을 40초로 예상했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선거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특별 예방·단속을 할 계획이다.

예방·단속 대상은 ▲사전투표 기간·선거일에 선거인 대상 교통편의와 금품·음식물 등 제공 행위 ▲투표참여 권유 대가로 금품 등 제공 행위 ▲가짜뉴스 등 비방·허위사실 공표 행위 ▲(사전)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인동을 하는 행위 ▲사전투표소 안에서 후보자·선거사무관계자가 선거운동 복장을 착용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표지를 착용하는 행위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등이다. /이범중 기자

## “北, 핵 프로그램 내용 공개 중요”

우리 하이노넨 IAEA 전 사무차장

우리 하이노넨 국제원자력기구(IAEA) 전 사무차장이 핵시설의 폐기와 감시, 고농축 우라늄의 외부 반출 등은 빠르면 몇 주에서 몇 달 안에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6일 보도했다.

하이노넨 전 사무차장은 5일(현지시간) RF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에서 과거

부터 현재까지 했던, 그리고 앞으로 할 계획이었던 핵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모든 고농축 우라늄을 외부로 반출할 의사가 있다면 이 과정은 꽤 빨리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라늄 농축 덩어리를 폐기하는 과정은 꽤 쉽다고 볼 수 있다”며 “몇 달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완전하게 끝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플루토늄과 경수로의 폐기는 이

보다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이지만, “이른 시기에 해결할 수 있는 특정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또 비핵화 이행과 검증 시간에 관해 “어떤 식으로 정의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반년 혹은 일 년 안에 많은 것이 이뤄질 수도 있다”면서 “핵시설의 폐기와 감시 등은 단 몇 주 안에 이뤄질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모든 시설이 영변에 있는 것이 아니고, 북한 내 여러 지역에 분포돼 있어 인력, 운송 수단 등 고려해야 할 사항도 많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6일 오후 서울역에 ‘6·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사전투표소가 설치돼 있다. 사전투표는 오는 8, 9일 이틀간 진행된다. /연합뉴스